

#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2024-제1호(Vol. 30호)」

본 자료는 2024. 2. 16.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에결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분야 (p1)	• 2024년 2월 KDI 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
	•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2. 재정분야 (p2)	• 월간 재정동향 2월호	기획재정부
	• 지방교부세 감액 354억원...최근 5년 중 최대 감액	나라살림연구소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p3)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법제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제처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p4)	• 강원지역 청년 유출 대응 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 강원도 관광, 관광객 수가 아닌 산업으로	강원연구원
5. 뉴스브리핑 (p5~6)	•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규모 적발	기획재정부
	•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교육부
	• 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국토부
	•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1. 경제

출처

## ■ 2024년 2월 KDI 경제동향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
  - 상품소비와 건설기성이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의 내수 부진이 물가상승세 둔화에 기여
  - 반면,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건조한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 이와 같은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는 생산부문에 반영되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된 반면,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임
  -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더라도, 비제조업 업황전망 심리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제조업 업황전망 심리지수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냄
  - 한편, 중동지역의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3.1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는 증가, 소매판매, 건설 투자는 감소
  -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 0.6%, 전년동월비 6.2%),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0.2%)이 모두 증가하여 쏠산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출은 설비투자(전월비 5.5%, 전년동월비 △5.9%)는 증가, 소매판매(전월비 △0.8%, 전년동월비 △2.2%), 건설투자(전월비 △2.7%, 전년동월비 △1.2%)는 감소
  - 소비자심리<'24.1월 CSI 101.6(전월대비 1.9p)>는 상승, 기업심리 중 실적<전산업 BSI '24.1월 실적 69(전월대비 △1p)>은 하락, 전망<전산업 BSI 2월 전망 69(전월대비 1p)>은 상승
- '24.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물가는 상승폭 축소
  - '24.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23.12월 28.5만명 → '24.1월 38.0만명),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승폭 축소('23.12월 3.2% → '24.1월 2.8%),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5%,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6%,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
- '24.1월 중 금융시장은 美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는 하락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

## 2. 재정

출처

### ■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3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대비 51.9조원 감소하였음
- '23년 세외수입은 28.5조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금융영업이자수입 증가(+1.5조원) 등에 기인함. 다만, 예산 대비로는 3.5조원 증가
- '24년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5조원(경쟁입찰 규모는 11.0조원)
  - 최근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 \* 3년물(% 기말): ('23.8)3.711 (9)3.884 (10)4.085 (11)3.583 (12)3.154 ('24.1)3.261 (2.8)3.305
  - 10년물(% 기말): ('23.8)3.821 (9)4.030 (10)4.325 (11)3.699 (12)3.183 ('24.1)3.345 (2.8)3.400
  - '24년 1월 국고채 발행량은 12.5조원으로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상승하였다.
  - '24년 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입(+1.6조원) 전환

(단위: 조원, %)

	'22년	'23년				'24년	1월	
			10월	11월	12월			
□ 발행잔액	937.5	998.0	1,011.6	1,016.1	998.0	1,010.0	1,010.0	
□ 발행액	168.6	165.7	10.5	6.9	4.0	12.5	12.5	
□ 평균 조달금리	3.17	3.57	4.07	3.87	3.52	3.27	3.27	
□ 응찰률	275	271	291	304	285	333	333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92.9 (+28.9)	219.5 (+26.5)	218.6 (+4.7)	221.7 (+3.1)	219.5 (△2.2)	221.1 (+1.6)	221.1 (+1.6)
	보유비중	20.5	22.0	21.6	21.8	22.0	21.8	21.8

### ■ 지방교부세 감액 354억원...최근 5년 중 최대 감액

(내용 요약) [바로가기](#)

나라살림연구소

- 2023년 재정운용 결과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총 35,440백만원임. 지자체 76곳에서 117건이 감액됨. 이는 최근 5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감액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규모임
- 사유별로는 공사/설계 관련 감액이 10,408백만원(10건)으로 가장 많음. 이어 특별교부세 관련(9,381백만원, 35건), 사업관리부적정(7,072백만원, 38건) 순임. 특히 특별교부세 관련은 이전과 달리 감액 사유로 급증해 지자체별 집행 관리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는 세가지임. △보통교부세 허위 자료 제출, △수입징수태만, △법률위반 과다지출임. 지방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임
- 수입징수태만이나 불법적 지출은 해당 정부에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입힘. 동시에 교부세 운영체계 상 다른 지자체에 피해를 미칠수도 있기 때문임. 감액 사유는 일상업무에서 발생함. 특수한 사유가 아님으로 타 지역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재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재정 · 예산 관련 법령

출처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개정 '24.2.13 시행 '24.8.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며,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24.2.13. 시행 '24.2.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공포,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에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업무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 '24.2.6. 시행 '24.2.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24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농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강원지역 청년 유출 대응 방안

(내용요약) [바로가기](#)

- 강원지역의 이동인구\*는 최근 중장년 및 고령인구 순유입 지속에도 불구하고 청년\*\* 순유출 확대로 감소 전환

\* 이동인구= 전입인구 - 전출인구(주민등록 기준)

\*\* 중장년 및 고령층을 50세 이상 인구로, 청년인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로 정의

- 청년층의 도내 이탈은 ① 양질의 일자리 부족, ② 미흡한 주거여건, ③ 열악한 교육 및 보육 여건 등에 주로 기인함.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청년이 일하고 싶은 강원으로 도약)
- 월세비 지원, 주택 신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하고,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청년이 머물고 싶은 강원으로 발돋움)
- 또한, 산학연계 강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참여형 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보육여건을 개선(청년이 공부·육아하고 싶은 강원으로 성장)

한국은행  
강원본부

### ■ 강원도 관광, 관광객 수가 아닌 산업으로

(내용요약) [바로가기](#)

- 지역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성과는 지역관광의 양적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관광객 수와 관광소비 지출의 총량이 지역 관광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제는 단순한 총합이 아닌 본격적인 산업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바라봐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은 단순한 ‘Tourism’이 아닌 Tourism+Economics’를 정책적 대상으로 삼고, 사람을 모으는 단일목적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유럽은 다양한 시설과 시스템으로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도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트랙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

강원연구원

# 5. 뉴스브리핑

출처

## ■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규모 적발

(내용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493건 700억원 규모... 윤정부 국정과제 '사각지대 점검' 이행결과
- 폐업 사업장 지원, 인건비 중복지급 등 숨어있던 부정수급 정상화
- 올해 현장점검 대폭 강화, 보조금 낭비사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24.2.15)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함.

\*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

지난해 점검 결과,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하여 493건에서 699.8억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

이번 실적은 '18.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22: 4,603건 → '23: 7,521)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22: 330건 → '23: 400)한 결과임

## ■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내용요약) [바로가기](#)

교육부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기본계획 2주기(2024~2026) 사업 수립·발표
- 「고도화형」, 「폴리텍 연계형」 신설로 사업 성과 확대,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

교육부는 1월 26일(금)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을 수립·발표 함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옴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 (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함

## 5. 뉴스브리핑

출처

### ■ 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내용 요약)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 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자율주행화물운송, 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8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함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 함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 특례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 △도심 수요병합형 모빌리티서비스, △캠핑카 공유 서비스, △e-잉크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내용 요약)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

- \* (대상지역)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거창, 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